

# 금리자유화 발표 그날 전면개각... 개혁, 석달도 못 갔다

The JoongAng Plus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㉒

나는 87년 5월부터 88년 2월까지 9개월간 제5공화국 마지막 재무장관(32대)으로 일했다. 이어서 제6공화국 초대 재무장관(33대)으로 유임되어 88년 12월까지 10개월간 일할 수 있었다. 총 19개월간 재무장관직을 수행한 것이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결코 장수 장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 그 이전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근 4년간 재무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이어서 재무장관으로서 중단 없이 주요 재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중시하여 재무장관으로 연임된 예외적 경우이다. 따라서 긴 안목의 순차적 로드맵에 따라 주요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33대 재무장관 취임 직후 수개월간 나와 재무부 실무진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 국회 하에서 오랜만에 실시된 국정감사 등에 대해 '과거 정책 청산 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정책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정부 주도 경제운용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 자율화의 궁극적 목표였던 금리 자유화를 추진하는 일은 미룰 수 없었다.

당시에 나는 88년 하반기가 그동안 준비해 온 금리 자유화를 단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먼저 실물경제 측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물가안정 속에서 국민저축이 투자수요를 초과하는 순국민저축 시대(86년부터)를 맞은 지 수년이 지났다. 거시적으로 볼 때 금융시장의 초과자금수요의 소지가 사라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공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추진해 온 부실기업(은행 부실채권) 정리와 꾸준한 은행 자본 확충으로 은행의 자립 기반이 갖추어졌다.

또한 과거 정부 주도하에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은행 대출심사 기능 향상 등 은행 자율 경영능력도 배양되었다. 한마디로 드디어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그리고 제도적 여건이 성숙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금융산업과 금융서비스 시장의 대외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금리 자유화를 통한 금융권 스스로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했다. 더 이상 정부가 직접 나서 금리를 결정하고 은행별 여신관리를 통해 통화·신용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당시에도 정부 안팎에는 '금리 자유화 시기상조론'을 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시기상조론의 핵심은 시중 금리의 대폭 상승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나는 모처럼 마련된 개혁의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금리 자유화 직후에 과거 정부가 일일이 결정해 온 여러 상품 간의 자금 이동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일부 금리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오히려 이 현상은 금리 자유화에 따라 금융시장 시장 왜곡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나타날 일시적 현상으로 보면 된다. 나는 금리 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원칙



1988년 4월 여소야대로 출범한 13대 국회에 출석한 나웅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앞줄 왼쪽), 사공일 재무장관(오른쪽) 등 국무위원들. [중앙포토]

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총동화증가 목표 18% 선은 지키되, 시장금리 동태를 보아가며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이른 시일 내에 금리는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문제를 당시 학계와 금융권의 전문가들과도 많은 논의를 했다. 물론 재무부 관련 간부들의 의견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당시 금융정책 주무사무관을 혼자 불렀다. 허심탄회한 개인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함이 있다. 특히 금리 자유화 시 금리 급상승 가능성에 대한 그의 소신을 물었다. 당시 재무부의 일부 간부들마저 조심스러운 금리 자유화에 대해 그는 "장관 소신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리고 총동화량(18% 목표)의 0.5% 정도의 탄력적 운용만으로도 일부 시장금리의 상승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화 이후에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통화 공급을 1% 정도 여유 있게 운영하면 3개월 이내에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는 당시 내 생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줘 무척 기뻐했다. 금리 자유화 이후에는 시중금리 자체를 통화량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또 다른 정책 목표로 이용할 수 있다.

88년 12월 5일에 확정 발표된 금리 자유화 방안은 재무부 소관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그해 초부터 수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특히 5월에는 '금리 자유화 추진 방향'이란 구체적 대외비 안건으로 전문가들 간의



1987년 12월 9일 금융·세계발전심의회 리셉션에 참석한 사공일 재무장관(왼쪽 다섯째)이 김병주 서강대 교수(왼쪽), 변형운 서울대 교수(왼쪽 셋째), 구본호 KDI 원장(오른쪽 둘째) 등과 건배하고 있다. [중앙포토]

토론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장에 알려 시장의 반응을 보려는 뜻도 있었다.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금리 자유화 방안이 발표된 12월 5일에 전면 개각이 있었고 나는 정부를 떠났다. 물론 전면 개각에 따른 인사였지만, 그동안 강력한 의지로 금리 자유화를 추진해오던 장관의 교체는 금융 시장에 주는 정부의 부정적 메시지가 된다. 특히 시기 상조론적 시각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리더십 교체는 그때 시기가 더욱 분명해진다. 실제 개각 이후 3개월도 채 못 된 시점에서 정부의 12·5 금리 자유화 방안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증발요인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상승 기미를 보인 것이 그 판단의 근거였다.

나는 지금도 12·5 금리 자유화의 반복을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더욱이 당시의 금리 자유화 시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어떻게 정부가 제대로 추진해 보지도 않은 정책이 실패할 수 있나. 집행을 포기하여 시기상조론의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된 것이 아닌가.

오래전에 지나간 금리 자유화 시책의 성패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생각은 없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교훈은 재조명돼야 한다고 본다.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모든 정부정책의 성패는 시장의 반응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모든 시장 참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시장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정부란 추상적인 기구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개별 리더십이다. 따라서 개각을 통한 금리 자유화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리더십의 교체는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정부

의 정책추진 의지의 전환으로 시장은 해석한다. 더욱이 정부 내 정책추진 실무진부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개혁은 그 과정에서 개혁에 따르는 단기적 비용과 부담에 초점을 맞춘 현상 유지 논리에 부닥친다. 따라서 정부는 개혁에 수반되는 눈에 보이는 단기적 비용과 부담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 경제적 이득과 정책 실기에 따르는 국민 경제적 기회비용이 훨씬 크다는 확신으로 현상유지 논리를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을 향한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시장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나는 연거푸 두 번의 재무장관직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언론과 주변에서는 텃세가 세기로 유명한 보수적 재무 관료집단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느냐고 자주 물었다. 나는 리더십의 요체는 세 가지라고 믿고 일했다. 첫째 실력이다. 우선 실력 없이 부하의 승복과 희생을 기대할 수 없다. 둘째 리더는 개인적 공명심이나 사심을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 부하들은 다 안다. 마지막으로 솔선수범이다. 물론 장관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의 임기 보장과 인사권이 주어져야 한다. 나는 차관에서 사무관에 이르는 전체 인사권이 주어진 때 장관이었다.

보수적인 조직일수록 리더십에 대해 일단 승복하면 다른 조직에 비해 더한 충성심과 열정으로 리더를 따르는 특성도 있다. 부실 기업 정리 등 금리 자유화 준비 과정에서 재무부 실무진이 보여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모습을 나는 잊지 않는다. 베를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시 미국 재무장관과의 자본시장 개방 관련 담판을 위해 실무진이 업계와 정부 규제 관련 부서를 설득해 낸 일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된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 과정에서 보여준 실무진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나를 믿고 따라준 재무부 실무진 모두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운이 따라 준' 재무장관이었음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위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